

與 “리베이트 수사 왜 안 했나” vs 野 “오세훈 흠집 내기”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시 국감
한강버스 ‘뒷돈 의혹’에 오세훈 압박
GTX-A 공사 지연 등 책임 공방
“보강공사 관련 절차 진행” 설명**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뒷돈 수수) 의혹을 고리로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오 시장 흠집 내기’라며 엄호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의혹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자료 파기 의혹을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확대를 경계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행 지연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與,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 리베이트 의혹 집중 추궁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더 충격적인 건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의뢰 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5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얘기가 됐는데,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보고 자료와 수사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보고한 현안조사사항 보고서와 같은 달 12일 전후 작성돼 오 시장에 전달됐을 수사의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9월경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野, GTX 지연 책임 따져…용산공원 주택 활용엔 우려

국민의힘은 GTX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과 운행 지연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지 활용 검토에 우려를 제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졌다”며 “서울시가 알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은폐·축소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파악한 상태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철근) 보강공사를 하면 예정된 8월에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공원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용산공원이 오랫동안 외국군이 주둔했던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라며 “도무현 정부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부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용산공원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체 부지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탄전 부지를 활용해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심화되는 전월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삶의 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안정된 주거”라며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부담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만 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기업 총수 증인 미채택에 반발… 기노위 국감 끝내 파행

**국힘, 관계자 출석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 비판**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기노위) 한 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3대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총수들의 생각을 들어보야 함에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감은 이른바 ‘명지(이재명·김현지) 라인’으로 불리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등 제출 거부로 파행됐다.

기노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 진행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호남에 투자하게 놔두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료 미제출에 항의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역감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과 경제계 입장에서 제일 예민한 규제가 환경과 노동 규제”라며 “기업 활동을 해보면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가 다 시행되고 있어서 SK와 삼성 총수가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과 노동 규제가 국회에서 양산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노동과 환경 규제를 다 건어내는 식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건어내는 식으로 하는데, 기업과 노조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연 배우 없는 드라마랑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 용수와 관련한 피감기관 관계자가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상임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자료 미제출로 파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원장 공모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으나,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 실장, 남광우 원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동근 사장의 경우, 사장 공모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모두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장직에 최종 임명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강훈식 시장 차출론에 김민석 “미래 열려있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 장 출마설을 두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또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며 “본인이 조금 쉬고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더 깊게 들어가는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할텐데 그것이 얼마나 허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했에 달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 시장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사회자가 ‘강 전 실장이 그리 마음대로 오래 쉬지 못할 것 같냐’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될 때”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4일) 강 전 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제청장을 임명했다.

강 전 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강 전 실장은 15일까지 업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용인갑 경선 두고 고성 충돌

양향자-장동혁 최고위서 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두고 고성인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결선에서 패배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재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해당행위’라며 강하게 맞섰다.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추진한 ‘당원직선제’가 이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처음 도입된 가운데, 양 최고위원이 도

전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ARS 투표 통신사 오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ARS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선투표 재선거’를 결정했으나, 양 최고위원은 타지역 당협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총 4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용인갑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많다.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실 사태) 원칙을 이반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며 “전체 선거 전수조사,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며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겠다고, 이의제기하지 않

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냐”라고 비판했다.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된 이후에도 장 대표와 정 사무총장 등이 양 최고위원과 설전하며 고성인 오갔다. 정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 “소설 쓰고 앉아 있다”고 말하며 “재투표 당일에는 결과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인성을 높였다.

장 대표 역시 “재선거하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 없는 사람 만들고, 울공에 나가 참정권을 위해 싸우는 대표까지 XX 만들고 정치를 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 기자 syj@